어떻게 건설되나

공정률 25%…3년내 자족형 생태도시로

731만㎡ 인구 5만여명 신도시 조성

17개 기관 내년부터 속속 청사 착공

나주시 금천·산포면 일원에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부지 조성 공사가 전체 공정율 25%를 기록하는 등 활기를 띠고 있다. 모두 1조 6천513억원이 투입되는 혁신도시 조성사업은 오는 2012년 완료된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세종시 논란'과 맞물려 축소 및 지연 우려로 한때 위기를 맞았던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이하 나주혁신도시)가 이전 기관 중 최대 규모인 한국전력의 부지매입 계약 체결로 본 궤도에 올랐다.

한전의 경우 이전 기관 중 최대 규모인데다 3개의 자회사까지 이끌고 있는 선도기관이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나주혁신도시 건설사업이 한전의 부지매입 계약 체결로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주혁신도시 어떻게 건설되나=나주혁신도시는 나주시 금천·산포면 일원 731만5천148.8㎡(221만 평) 면적에 1조4천18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인구 5만 명(2만 세대)의 자족형 독립 신도시로 조성된다. 이곳에는 여수시로 개별이전하는 해양경찰학교를 제외한 한전 등 17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온다.

지난 2007년 11월8일 혁신도시 건설 공사가 착공됐으며, 오는 2012년 12월까지 혁신도시 완공 및 공공기관들의 이전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이전부지는 나주혁신도시 전체 부지의 10%에 달하는 75만3천420㎡이며, 나머지 부지는 ▲산학연 클러스터 36만여㎡ ▲상업·업무용지 28만여㎡ ▲주택용지 190만여㎡ ▲공원·녹지 18만6천여㎡ ▲학교·문화시설 등 도시지원시설용지 214만7천여㎡ 등으로 구성된다.

◇공사 진행 상황=나주 혁신도시 부지조성공사(9개 공구)는 LH와 광주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가 각각 3곳씩 나눠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전체 공정률은 25%로 1-1공구의 경우 6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LH가 맡은 부지조성 면적은 311만㎡로 1공구(62%), 2공구(5.7%), 3공구(1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전남개발공사가 맡고 있는 부지 246만1천㎡의 공정률은 평균 9%를 보이고 있다.

광주도시공사의 담당 면적은 174만4000㎡로 평균 17%의 진척도를 나타내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 생태·교육 도시=나주혁신도시는 녹색전력(스마트그리드) 에너지 산업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생태 도시, 인간중심 미래형 도시로의 조성이 추진된다.

공동혁신도시에 들어서는 공동주택 건물 중 임대주택 5천23가구와 민영주택 1만6천786세대 중 2천 세대, 단독주택 840세대에는 태양광·태양열 등의 시설이 설치된다.

또한, 가로등·주차장 시설 등에 대해서 신 재생에너지 시설이 설치되고, 학교·우체국·문화·복지시설 등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설도 설치될 예정이다.

아울러 첨단정보 체계를 통해 교통·재해·재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전력량 자동검침, 교통·행정·방재·치안·시설 관리 등의 스마트 그리드가 실현되는 도시로 조성된다.

이와 함께 자립형 사립고 설립도 추진중에 있어 나주혁신도시는 명실공히 생태·교육도시로 새롭게 태어날 전망이다.

◇부지 매입 등 추진 순조=한전의 본사 부지매입 계약으로 나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부지매입 기관은 3곳으로 늘었다.

지난 7월31일 aT(농수산물유통공사)가 전국 10개 혁신도시 이전 기관 중 처음으로 나주혁신도시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29일에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공단이 두 번째로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했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1만8천757㎡의 부지를 84억8천900여만 원에 매입했으며,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공단은 1만919㎡의 부지를 49억4천100여만 원에 일시금으로 매입했다.

나주혁신도시 이전 기관 중 가장 큰 규모인 한전은 29일 나주혁신도시 이전 기관 중 세 번째로 14만9천372㎡부지를 676억621만5천여 원에 계약했다. 3개 기관 이외에도 한전KPS가 30일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어서 나주혁신도시가 전국 10개 혁신도시 기관 중 이전기관 부지매입 계약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한전 KBN, 농어촌공사, 농업연수원, 우정정보사업센터 내년 본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부지 매입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나주혁신도시 이전 추진상황

구분	기관명	이전예산확보(억원)	이전 추진상황
	17개기관	895(10)	
주택토지공사(8)	한전KPS	120	부지매입계약(12. 30)
	농어촌공사	197	내년 상반기 부지매입 예정
	농업연수원	11	
	농수산물유통공사	37	부지매입계약(3. 31/21억)
	콘텐츠진흥원		국토부 입지결정 검토중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	61	부지매입계약(12. 29 일시불 완납)
	저작권위원회		국토부 입지결정 검토중
	문화예술위원회		'10년도 이전예산 관계부처 협의중
광주도시공사(4)	한국전력	271	부지매입계약(12. 29)
	한전KDN	80	내년 상반기 부지매입 예정
	농촌경제연구원		청사 설계 추진 준비중
	전력거래소	89	부지매입계약(12. 29)
전남개발공사(4)	전파진흥원		이전계획 검토중
	전파연구소	11	청사설계 발주(9. 22)
	인터넷진흥원		국토부 입지결정 검토중
	우정사업정보센터	17	내년 상반기 부지매입 예정
개별(1)	해양경찰학교		여수 오천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나주혁신도시 추진 일지

▲2004. 4. 균형발전특별법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 법적 근거 마련
▲2005. 6. 24.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안 최종 확정 발표
▲2005. 11. 30. 공동혁신도시 최종입지 '나주확정'(건설교통부)
▲2007. 1. 11. 혁신도시특별법 제정
▲2007. 3. 19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2007. 10. 8 혁신도시 보상 착수
▲2007. 11. 8 공동혁신도시 기공식
▲2009. 7. 농수산물유통공사 부지매입 계약
▲2009. 나주시청과 혁신도시 간 연결도로 착공(현대건설)
▲2009. 12. 28.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공단 부지매입 계약
▲2009. 12. 29. 한전 본사 부지매입 계약
▲2010 상반기 한전,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이전 선도기관 본사 착공
▲2012. 12. 혁신도시 완공 및 이전완료

"한전 부지매입 계기 조성사업 활기"

나도팔 혁신도시 지원단장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한국전력 사옥 건립사업이 착공되는 등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활기를 띨 것입니다."

나도팔 광주·전남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은 29일 "한국전력이 이전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한 것을 계기로 나머지 기관들의 이전이 가속화할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단장은 "한전의 부지매입은 세종시 논란 등으로 인한 혁신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우려를 씻어내는 계기가 돼 타 기관들의 이전도 가속화할 것이다"며 "올해 이전 예산이 확보된 기관 7곳 가운데 한전KPS 등 5곳이 부지매입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나 단장은 "이전 대상 기관인 한전KBN , 농어촌공사, 농업연수원, 우정정보사업센터도 내년도 이전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상반기 중 계약이 가능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는 혁신도시 조성사업 계획과 관련, "혁신도시 주변지역에 200만평 산업단지를 조성해 혁신도시가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혁신도시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지조성 원가 인하 요구에 대해 "부지조성 원가의 인하를 정부에 건의했기 때문에 원가 인하 요인이 발생할 경우 부지매입 계약 후에도 가격이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정부 확고한 의지·지속 지원 필수

교통·교육여건 등 자족기능 강화

■혁신도시 성공 조건

나주혁신도시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혁신도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역민의 여론이다.

'세종시' 논란으로 지지부진했던 혁신도시가 급물살을 탄 것도 정부의 확고한 의지 표명과 이전기관의 부지매입 계약 체결을 독려하면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혁신도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상하수도와 광역도로망 등의 국비지원 등의 행·재정적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 조성 원가를 낮춰 인구 유입을 늘려야 혁신도시 활성화는 더욱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사업인 만큼 혁신도시 완전 정착까지는 꾸준한 관심을 갖고 살피고 보완할 부분은 빠르게 보완해야 한다. 또한, 이전기관들의 차질없는 이전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전기관들이 부지매입 계약만 체결해 놓고 공사 조기 착공에 나서지 않는다면 또다시 혁신도시는 지지부진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전기관들도 애초 이전 계획에 따라 청사 실시설계·착공 등 이전 작업을 서둘러 혁신도시 성공에 힘을 모아야 한다.

아울러 이전 기관 임직원들이 정착하기 위한 자족기능 강화도 이뤄져야 한다.

이전 기관 임직원들 대부분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불만을 수도권과의 접근성 제고가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호남고속철도의 조기 완공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동시에 나주~서울 간 셔틀버스 운행 등 지자체 차원에서의 교통 대책을 세워야 하고, 교육여건 개선 역시 혁신도시 활성화의 필수 조건으로 꼽히고 있다.

교육여건이 열악할 경우 자녀를 수도권에 두고 나 홀로 이주하는 임직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다. 이럴 경우 인구 증가는 이뤄지지 않고 '반쪽' 혁신도시에 그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지역민들은 민사고 유치 등 우수 인재유치를 위한 교육기관 설립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만의 혁신도시가 아닌, 지역발전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미래상 정립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